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1

2016.7.1.(금) 14:00

플랫폼 창동 61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문화담론 순환선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을 만들어가는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의 첫 번째 출발지로,
동북지역의 문화창조 클러스터의 주춧돌인 플랫폼 창동61을 선택했습니다.
61개의 독특한 컨테이너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르음악의 실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예술의 결합,
그리고 동북권 4개 자치구들의 문화적 협력에 주목합니다.

I. 행사소개

- 포럼 개요 ...p.1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소개 ...p.3
- 문화담론 순환선 소개 ...p.5
- 플랫폼 창동 61 소개 ...p.8

II. 발제자료

- 장소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창동 61'의 의미와 확산 가능성 ...p.13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플랫폼 창동61 총괄 예술감독)
- 서울시 동북4구, '문화창조도시'의 가능성과 잠재성 ..p.21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1. 포럼 개요

- 행사명 :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1 @플랫폼 창동 61
- 일시 : 2016.7.1.(금) 14:00~17:00
- 장소 : 플랫폼 창동 61
- 주제 : 문화정책의 지역화 _ 동북4구 창조문화도시의 꿈을 꾸다
- 참석예정자
 - 발제 및 토론자, 동북4구 발전협의체 관계자
 - 서울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실무자급 (자치구 및 문화재단 담당자 초청)
 - 문화정책 연구자 및 일반 시민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재단 임직원
- 행사취지
 -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을 찾아가는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의 의의 공유
 - 동북지역의 문화창조 클러스터의 시발점에서 서울의 권역별 행정협의체를 통한 문화정책의 지역화의 가능성을 확인함
 - 서울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의 의미와 확산 가능성 토론

2. 진행계획

시간	구성	진행내용
13:20 (30분)	투어	플랫폼 창동61 공간 설명 투어 (플랫폼 창동61 운영팀)
13:50 (10분)	등록	참가자 등록 (@레드박스)
14:00 (10분)	도입	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정책연구팀장)
		환영 인사말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개회 인사말 및 포럼 취지 소개 (사회자 : 이창현 문화정책위원장)
14:10 (60분)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창동61'의 의미와 확산의 가능성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플랫폼 창동 61 총괄 예술감독) 서울시 동북4구, '문화창조도시'의 가능성과 잠재성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15:10 (10분)	휴식	커피 브레이크
15:20 (90분)	토론	지정토론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준기(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강원재(OO은대학연구소 제1소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자유토론 -문화정책위원 및 참석자 전원
16:50 (10분)	폐회	토론회 종합 및 폐회인사
17:00 (60분)	뒤풀이	다과를 겸한 네트워킹 (@쿠킹클래스)
18:00	종료	

*포럼 사회 : 이창현 문화정책위원장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前서울연구원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소개

□ 설치 목적

- 문화거버넌스 구현과 문화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할 상시 기구 운영

□ 담당 역할

-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 의견 전달을 통해 문화거버넌스 구현에 기여
- 서울문화재단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제공

□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 (19인) (가나다순)		당연직 위원 (5인)	
성명	직 합	성명	현직
강원재	OO은대학 연구소 1소장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상무, 시인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은주	서울시 문화정책팀장
김준기	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미술평론가	재단 대표이사(조선희) 당연 참석 정책연구팀장이 간사 역할 담당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		
라도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 상생본부장		
박혜숙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		
설재우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기웃 대표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안애순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위원장)		
임인자	독립기획자, 前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최 선	설치미술가		

□ 2016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개요

- 4개 소위 구성 : 생활문화, 지역화 전략, 사회(적)예술, 예술가 소위
-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문화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겸한 4회의 정책포럼과 소위원회별 세미나 개최
- 전체 활동 결과는 서울시 문화정책 지역화 전략 보고서로 정리되어 서울시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제출 예정
- 격월로 현장의 정책토론을 지원하는 <현장+담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위	생활문화	지역화 전략	사회(적)예술	예술가
문화정책위원회	김연진, 박삼철 박혜숙, 윤성진 임미혜, 임인자 송혜진, 노은주	강원재, 김종휘 김준기, 노은주 라도삼, 최 선 오진이, 이원재	김영호, 김준기 김연진, 문건영 설재우, 이원재 이은주	곽효환, 김성규 송혜진, 안애순 이규석, 임인자 최 선
기획위원회	김연진	김종휘	김준기	임인자
주제	생활문화의 의미와 정책 방향 설정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	문화도시에서의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이 시대 우리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의제
세부 토의 내용 및 활동 방향	<p>※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생활문화의 의미 정리 및 현재의 진단, 정책방향 설정</p> <p>-생활문화의 의미</p> <p>-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설정</p> <p>-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문화 주체와 거점</p> <p>-거점공간 활용 방안으로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방향성 제안</p>	<p>※ 지역문화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의 방향성과 가능성 토론</p> <p>-서울시 문화정책 지역화의 의미와 방향</p> <p>-지역화의 주체와 네트워크</p> <p>-서울시에 제안하는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p>	<p>※ 자본주의 대도시의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망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p> <p>-도시공간과 사회적 예술 (도시 재생 포함)</p> <p>-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예술</p> <p>-공공예술과 사회적 예술</p> <p>-이 시대 사회적 예술의 지형과 정책방향 (종합)</p>	<p>※ 이 시대 예술가의 실존 및 생존과 관련된 주요 의제 4개를 설정하고 격월로 열린 포럼 개최</p> <p>-검열</p> <p>-제도의 재구성</p> <p>-예술노동의 대가</p> <p>-예술의 가치와 공공성</p>

문화담론 순환선 소개

“문화담론 순환선”은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가 현장과 소통하는 포럼입니다.
문화적 에너지가 모이는 25개 서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지금 우리가 공유해야 할 문화담론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주 제 : “25개의 서울 _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

○ 내 용

- 문화정책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의 순회 토론회
- 동시대 주요 문화정책 의제와 관련된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찾아가며 총 4회 개최

일시	장소	주제
7.1(금) 14:00	플랫폼창동61	문화정책의 지역화 _동북 4구 창조문화도시
9월 초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예정)	생활문화 _진단과 방향설정
11월 초	언더스탠드애비뉴(예정)	사회(적)예술과 도시 _생과 지속의 조건
12월 말	문래예술공장(예정)	예술가 의제 _도시, 생존, 예술의 가치

- 소위원회별로 포럼의 사전 준비 및 후속정리 세미나를 도시순환선 인근 문화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
- 전체 포럼 결과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 보고서>로 정리되어, 서울시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제출될 예정

○ 주최/주관 : 서울문화재단/문화정책위원회

○ 문화담론 순환선 기획 취지

[문화의 정책 vs. 담론]

- 사회, 경제, 도시재생 등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만능 문화정책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인데, 정작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음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창조계급들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부터 지가를 올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시발점으로 까지 이해되고 있고,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하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부터 관광객도 좋아하는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언급되고 있음
- 사회 전반에 걸친 저성장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성찰의 시대로의 전환기에, 가치와 개념의 혼란이 정책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지금, <공표되는 정책>보다는 <공유하는 담론>이 절실히 필요함

[지역문화시대의 지역 vs. 순환]

- 서울은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클러스터이지만, 그 안에 있는 <25개의 서울>에는 각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지닌 문화클러스터들이 씬 없이 생성되고 있음
- 지금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문화적 중심지를 만들어내는 글로컬 시대,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문화적 경쟁력으로 키워내야 할 지역문화의 시대, 보편적 문화서비스로 시민의 문화적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하는 문화기본권의 시대임
- 서울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예술적 중심지(forcal point)>를 지향하는 광역적 문화활동과, <일상 속 문화공동체(cultural neighborhood)>를 지향하는 지역적 문화활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예술적 중심지(forcal point)>를 지향하는 광역적 문화활동과, <일상 속 문화공동체(cultural neighborhood)>를 지향하는 지역적 문화활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광역-지역으로 정확히 이어지는 문화정책 <전달체계>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에너지를 25개 서울이 공유할 수 있는 <순환채널>이며, 그것이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전략>이어야 함

[green line vs. 순환선]

- 대도시 서울을 순환하는 녹색 띠는 끊이지 않는 교통의 흐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흐름, 즉 문화의 흐름임. 따라서 문화 에너지가 흐르는 순환선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됨
- 창의적인 문화의 에너지는 생명을 담고 있는 녹색의 에너지와 상통함
- 물처럼 흐르다 잠시 머물며, 함께 깊은 생각을 나누는 것처럼, 문화자원들이 모여 있는 서울의 곳곳을 함께 옮겨 다니며 창의적인 문화담론을 나누는 것이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포럼 <문화담론 순환선>의 취지임

○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전체 일정(안)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소위원회별 준비/정리 세미나			
		생활문화 소위원회	지역화전략 소위원회	사회(적) 예술 소위원회	예술가 소위원회
6월		생활문화 세미나 #1 6.20(월) / 대학로연습실 ▷사례에서 찾는 의미			예술가의제 포럼 #1 6.13(월) / 대학로연습실 ▷공공성과 검열
7월	1차 포럼 7.1(금) / 플랫폼 창동61 ▷문화정책의 지역화 - 동북4구 창조문화도시	생활문화 세미나 #2 7월 말 / 성북도원 ▷생활문화의 주체들			
8월			지역화전략 세미나 #1 8월 초 / 성북문화재단 ▷지역화 _ 의미와 방향	사회적예술 비평포럼 #1 8월 초 / 서촌 ▷도시공간과 사회적예술 (도시재생)	예술가의제 포럼 #2 8월 말 / 서교예술실험센터 ▷제도의 재구성
9월	2차 포럼 9월 초 / 은평문화예술회관 ▷생활문화 - 진단과 방향설정		지역화전략 세미나 #2 9월 말 / 마포문화재단 ▷지역화 _ 주체와 네트워크	사회적예술 비평포럼 #2 9월 말 / 무중력시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예술	
10월				사회적예술 비평포럼 #3 10월 말 / 세운상가 ▷공공예술 vs. 사회적 예술	예술가의제 포럼 #3 10월 초 / 연남동 ▷예술노동의 대가
11월	3차 포럼 11월 초 / 언더스탠드애비뉴 ▷사회(적)예술과 도시 - 재생과 지속의 조건	생활문화 세미나 #3 11월 초 / 이화동사무소 ▷거점 _ 동주민센터	지역화전략 세미나 #3 11월 말 / 성동문화재단 ▷지역화 _ 전략		
12월	4차 포럼 12월 말 / 문래예술공장 ▷예술가 의제 - 도시, 생존, 예술의 가치				

※포럼 및 세미나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확정되며, 오픈포럼과 초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시된 장소는 예정지역으로서, 각 자치구에서 행사 공동주최나 장소제공 가능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성승환 대리 : 02-3290-7196)

플랫폼 창동 61 소개



- 컨셉 : 도시재생, 다시 태어나다 (Urban Regeneration, Born this way)
- 개요 :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의 도시재생과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창조하는 공간

- 플랫폼창동61은 음악과 푸드, 패션 분야의 콘텐츠가 한 데 어우러진 트렌디한 복합 문화 공간
- 약 630평(약 2,790m²) 규모에 61개의 대형 컨테이너로 구성된 건축으로, '레드박스'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공연과 푸드, 스타일, 포토 클래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Container Theater 컨테이너 공연장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쇼핑몰을 넘어 컨테이너 공연장의 등장 붉은색의 '레드박스' 공연장을 중심으로 색색깔의 컨테이너가 모여 창동 일대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무대, 그야말로 '새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Director 분야별 디렉터가 기획하는 공연과 프로그램

뮤직 디렉터 신대철, 푸드 디렉터 최현석, 패션 디렉터 한혜진, 포토 디렉터 조세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공연과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새로운 아티스트들과의 색다른 콜라보, 상상 그 이상의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veryone 시민이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핫 플레이스

시민들이 참여하는 쿠킹, 스타일, 포토 클래스는 물론 다양한 페스티벌 공간을 만드는 사람,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 모두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다함께 가꾸어가는 우리 동네 핫 플레이스, 누구나 '플랫폼 창동 61'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 뮤직 디렉터 신대철, 푸드 디렉터 최현석, 패션 디렉터 한혜진, 포토 디렉터 조세현
- 입주 뮤지션 : 신대철, 이한철, MC메타, 잠비나이, 아시안체어샷, 숨[su:m]
- 협력 뮤지션 : 김반장과 윈디시티, 킹스톤루디스카, 선우정아, 불한당크루, 비스메이저크루, 서사무엘, 하림, 김사월X김해원, 이영훈, 김오키, 정민아, 리듬꼴라주, 앙상블시나위, 고래야, 권송희 등 30팀의 뮤지션
- 협력 레이블 : 붕가붕가레코드, 러브락컴퍼니, 일렉트릭뮤즈, 바른음원협동조합, 사운드홀릭 등



○ **프로그램**

- **MUSIC & ART & CULTURE** 대한민국 장르음악의 오아시스

플랫폼 창동 61에서는
 록, 일렉트로, 힙합, 월드뮤직,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의 공연
 이 펼쳐집니다.



- 창동사운드 스튜디오에 입주한 입주뮤지션과 협력뮤지션들이 기획하는 [뮤직 큐레이션 콘서트]
- 장르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주변 문화를 경험해 보는 [창동사운드 페스타]
- 음악, 푸드, 패션이 융합된 신개념 스타일의 [플랫폼코드 콘서트]
- 뮤지션의 즉흥연주와 창작 실험이 이루어지는 [시나위 & 래그타임]
- 음악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특별한 수요일 [레드박스 웬즈데이]

- **LIFE STYLE (FOOD, FASHION, PHOTO)** 매일 꿈꾸는 색다른 일상

플랫폼 창동 61에서는 다양한 사진 전시와 페스티벌,
 쿠킹·스타일·포토 클래스가 열립니다.

- 시민작가의 사진이 주인공이 되는 [플랫폼창동61 사진관]
- 플랫폼창동61의 포트레이트 전문 전시관 [갤러리 510]
- 셰프와 나만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쿠킹 COOK 클래스]
- 스타일리스트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스타일 UP 클래스]
- 포토그래퍼와 마음을 렌즈에 담는 [포토 IN 클래스]
- 청소년 스쿨밴드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와우락 페스티벌]
- 열정 가득한 청년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함께 즐기는 [청년예술가 축제]
- 직장인의, 직장인에 의한,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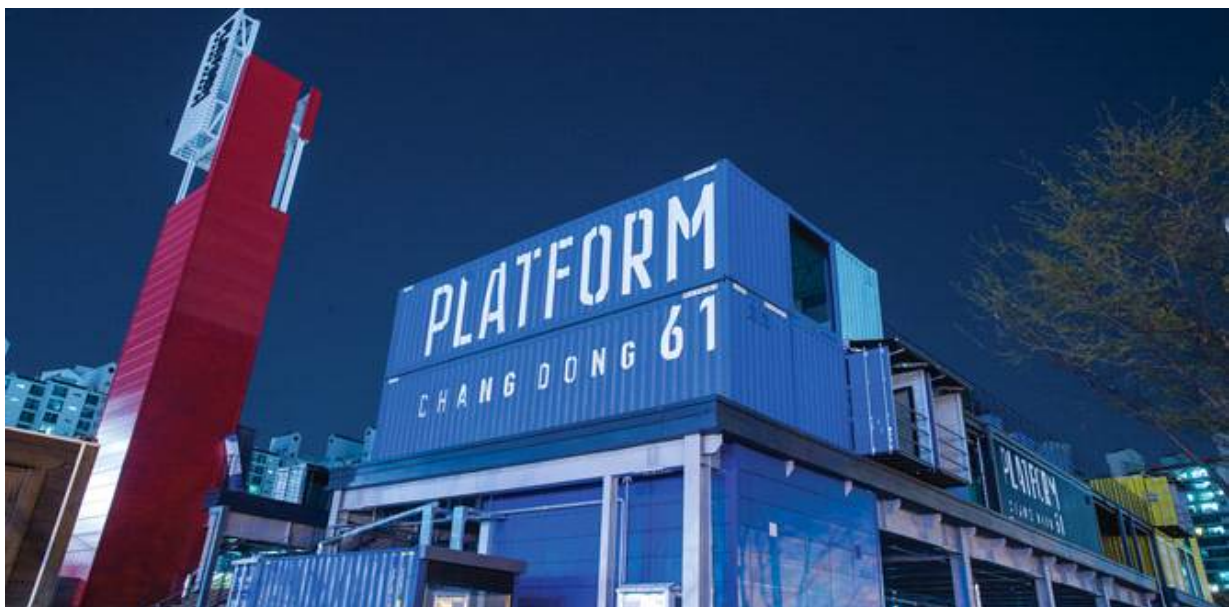


- **COMMUNITY**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플랫폼 창동 61에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 전국 최초의 권역별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직속기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원 및 동북4구 지역협력, 민관학거버넌스 등의 업무를 추진

- 꿈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 멘토 프로그램인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스쿨]
-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풍성한 클래스와 프로그램이 시민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latform61.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발제자료

발제1. “장소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창동 61’의 의미와 확산 가능성”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플랫폼창동61 총괄 예술감독)

발제2. “동북4구의 창조문화도시 자원과 잠재성 ”

-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장소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창동61’의 의미와 확산의 가능성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플랫폼 창동 61 총괄 예술감독)

플랫폼창동61이 4월 29일 개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장 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도 벌써 이곳 레드박스에서 30여회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포토, 푸드, 패션 클래스와 각종 쇼케이스, 뮤직비디오 촬영, 드라마 촬영과 패션쇼,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플랫폼창동61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문화재단들, 기업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컬러풀한 컨테이너들이 레고처럼 아기자기하게 배치된 탓에 이곳에서 연인-친구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으려는 젊은이들의 행렬이 이제는 일상적인 놀이가 되었다. 문화공간의 감성적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상업적인 커먼그라운드나 일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맛있는 언더스탠드 애비뉴와는 달리 플랫폼창동61은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컨테이너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이래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성한 공공인프라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문화공간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플랫폼창동61이 확실하게 정착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선부르지만, 그 가능성과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도 장소에 기반 한 장르음악을 정착시키겠다는 플랫폼창동61의 비전과 전략은 비록 음악인들의 자생성에 전적으로 기반 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생태계의 지각변동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홍대 뮤지션, 비평가, 기획자 간에 플랫폼창동61의 정체성을 놓고 논쟁 중에 있다. 플랫폼창동61은 아직은 단지 창동이라는 낯선 장소에 만들어진 음악 중심의 문화 인프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 장소적 정체성을 가진 홍대 음악신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플랫폼창동61은 창동사운드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플랫폼의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홍대 음악신과의 비교불가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플랫폼창동61이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몇 가지 토픽들이 있다. 첫째, 플랫폼창동61은 새로운 음악 신으로서 창동사운드라는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을까? 둘째, 플랫폼창동61은 서울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문화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셋째, 플랫폼창동61은 동북4구의 문화적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장소 정체성으로서 ‘창동사운드’의 위치

창동은 사실상 음악의 불모지이다. 이곳에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두드러질만한 역사적 유산들이 있었다는 예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창동사운드라는 말은 매우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창동사운드는 순전히 이곳에 2021년까지 서울아레나를 건립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많은 음악평론가들이나 홍대 인디음악 기획자들이 창동사운드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플랫폼창동61은 대중음악신의 자발적인 기획이 아닌, 서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에 불과하며, 홍대 음악신처럼 역사적 유산도, 음악적 정체성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 공연장으로서의 서울아레나에서 음악생태계로서의 서울아레나 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문화적 기획은 도시재생 사업, 그 너머의 기획이다. 그러한 문화 기획은 ‘기원’이 아닌 ‘생성’과 ‘문턱’으로서의 ‘창동사운드’라는 프로젝트의 명명을 정당화 해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문화의 모든 위치는 기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대중음악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생성되고 진화하고 소멸한다. 1960년대 초 영국 록 음악, 이른바 브리티시 록의 성지가 된 곳은 다름 아닌 리버풀이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리버풀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상하이가 그렇듯 새로운 유행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문화 예술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 리버풀 출신 폴 매카트니,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가 1962년에 결성한 ‘비틀즈’는 영국은 물론 유럽과 북미에 ‘비틀매니아’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리버풀을 일약 세계적인 대중음악 도시로 만들었다. 비틀즈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록 밴드 ‘롤링 스톤즈’, ‘애니멀스’가 가세하여 언제부턴가 이들의 새로운 밴드음악을 리버풀 사운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리버풀 근처에 위치한 맨체스터에는 이전의 록 음악과는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는 밴드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하드록과 일렉트로닉을 결합한 ‘애시드 하우스’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언더그라운드 클럽음악을 지향하는 ‘애시드 하우스’는 1970년대의 하드록과 1990년대의 브릿 팝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음악

스타일로 ‘스톤 로지스’, ‘더 스미스’, ‘뉴 오더’ 같은 밴드가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음악적 스타일을 일컬어 맨체스터 사운드라고 불렀다.

도시와 음악스타일을 접목하는 사례들은 이밖에도 매우 많다. 예컨대 ‘앨리스 인 체인’, ‘사운드가든’, ‘너바나’, ‘펄잼’ 등이 주축이 되어 얼터너티브록 신을 선언했던 시애틀 사운드, ‘닐 앤 이라이자’,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과 같은 밴드가 중심이 되어 레게, 보사노바, 라운지, 일렉트로닉이 혼합된 일본 식 클럽음악을 완성시킨 시부야 사운드, ‘브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라틴 음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하바나 사운드, 그리고 ‘크라잉 넷’, ‘노브레인’을 탄생시킨 한국 인디음악의 해방구 홍대 사운드가 대표적이다.

음악은 도시를 기반으로 발전한다. 클래식, 재즈, 록, 힙합 등 모든 음악 장르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2016년 봄에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원을 만들고자 창동 사운드를 꿈꾸는 것은 완전히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니다. 주지한대로 서울 동북권에 위치한 창동은 음악의 불모지이다. 이곳은 노원, 상계와 더불어 1980년대 조성된 베드타운 집적지로서 이렇다할만한 음악 관련 문화시설도, 클럽도, 레이블도 없다. 대중음악과 관련해선 거의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창동 사운드를 운운하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년 2월 초에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현지에서 창동에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로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창동은 이제 새로운 대중음악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창동61 공간에 개성이 강한 장르음악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고, ‘잠비나이’, ‘숨’, ‘MC메타’ 등의 스튜디오 입주 뮤지션들과 ‘이승열’, ‘스컬’, ‘갤럭시 익스프레스’, ‘킹스턴 루디스카’, ‘클렌체크’, ‘이디오테잎’, ‘모노톤즈’, ‘허클베리핀’, ‘양상블 시나위’ 등 총 40여 팀이 협력 뮤지션, 그리고 ‘붕가붕가레코드’, ‘사운드 홀릭’, ‘러브락 컴퍼니’ 등이 협력 레이블로 참여하고 있다. 창동 시리즈 공연, 뮤직큐레이션 콘서트, 시나위 & 래그타임, 수집콘(수요일 집에가는 중 콘서트) 등 창의적인 공연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록, 힙합, 재즈, 국악, 일렉트로닉 등의 장르음악들이 균형 있게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로 지어진 레드박스의 하드웨어 시스템과 음향적 조건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뮤지션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있어, 음향적으로 까다로운 접근이 필요한 장르음악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창동사운드’는 지금 실험 중에 있다. 창동사운드는 이 공간을 만든 사람들(특히 발제자)에 의해 인위적이고 임시적으로 연표화된 것이지만, 그 연표가 하나의 장소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과 사건과 토론이 필요하다. 창동사운드가 하나의 장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면, 먼저 이 장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사운드가 오랜 시간을 두고 영토화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차별화된 사운드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음악들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창동사운드가 장소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면 이곳에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뿐 아니라 대중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플랫폼창동61만으로는 창동사운드가 형성될 수는 없으며 이곳이 자생적인 클럽공간과 음악공동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5년 후에 건립될 서울아레나의 붐업 프로젝트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음악생태계의 중심프로젝트로 성공할 때, 창동사운드는 단지 기표가 아닌 실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의 문화적 대안으로서 ‘플랫폼창동61’

민선 6기 박원순 시정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사회혁신 정책과 더불어 박원순 시정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체제 이후 서울의 개발 사업들은 기존의 ‘철거-토목공사-개발’을 반복하는 뉴타운 사업 정책을 버리고, 오래된 건축물과 공간을 보존 유지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권역별로 중요한 재생공간들을 선정하여 도시 발전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는 세운상가 지역,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및 서울아레나 건립사업,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사업, 서울역고가 재생사업, 성수동 일대-마곡지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표] 서울시 도시재생 주요 사업의 현황

사업명	대상지역	주요 사업내용
세운상가군 활성화	세운상가 초록 띠 공원 세운상가 가동 청계대림상가	종묘-대림상가 방향 보행데크 연결 보행데크에 창의적 거점공간 조성 초록띠 공원 문화광장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창동 문화체육시설 부지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노원구 차량기지	대형 전문공연장 서울 아레아 건립 복합문화공간 플랫폼창동61 조성 창업지원센터 및 바이오 메디컬 단지 유치
마포석유비축기지	마포구 성산동 산 53	생태적 시민 문화공원 조성 거리예술 창작 공간
창신·송의 지역	종로구 창신 송의동 일대	봉제 및 의류 중심의 재생 공간 조성 수제 제조업과 사회적 기업
성동구 성수동 지역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성수동 수제화 거리 일대	수제화 제조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서울역 고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단절된 시민보행공간 확보 및 녹지공원화

위에 표로 정리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들은 대체로 문화예술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기획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창동61은 그런 점에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선도 사례라 할 수 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창동61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붐업사업이 되었다. 다만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 경향을 고려하면서 플랫폼창동61이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로만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대안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할 부분들이 많다.

플랫폼창동61의 의미를 충분히 지지하면서도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계는 이 프로젝트가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일반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매장 진출과 중국관광객의 급증, 임대료 급상승으로 문화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대 젠트리피케이션과 유명 연예인을 매개로 하는 투기성 기획부동산의 투기장소가 된 한남동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적 자원의 붐업과 활성화, 그리고 자본에 의한 희생으로 요약될 수 있는 문화재생형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적 운명의 대표적인 예증이 되었다. 홍대 클럽들과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자원이 도시재생의 붐업 프로젝트에 활용되다가 실제로 붐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들이 희생되는 전철을 ‘플랫폼창동61’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진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창동61은 민자 유치에 의해 조성되는 서울아레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붐업사업이고, 장차 서울아레나가 건립될 경우 창동 일대의 토지가치 상승이 예상되어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플랫폼창동61이 지금까지처럼 공공적인 지원을 뮤지션들에게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아레나가 조성될 경우 플랫폼창동61은 대형 문화인프라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주류 문화자본에 잠식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공공의 통제와 조절이 장기기획 하에 분명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은 플랫폼창동61의 공공적 가치들을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동-상계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점에서 세운상가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이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창동-상계’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낙후된 서울의 동북권을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활성화시키고, 노원 차량기지의 진접 이전에 따른 10만 여 평의 부지에 신경제 산업을 집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먼저 치고 나아가 경제가 뒤를 받는 식의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창동61→서울아레나→노원 신경제 중심 산업이라는 단계적 도시재생 사업은 이 지역 환경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기획이다. 그래서 문화에서 경제로, 음악에서 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문화-음악’의 계열과 ‘경제-산업’의 계열이 ‘생태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플랫폼창동61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붐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는 형국에서 흥대나 이태원 식 젠트리피케이션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돈벼락을 맞기도 전에 집안에 도둑이 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서울아레나가 건립이 될 5년 후에 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곧바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창동젠트리피케이션은 급격하게 도래할 수도 있다. 자본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창동61이 도시재생의 문화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뮤지션-문화기획자-지역주민-서울시-기초지자체’ 사이에 문화와 음악의 종다양성이 이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을 위한 협치 시스템이 지금부터 가동되어야 한다. 문화적 자원이자 도시재생의 문화적 대안으로서 ‘플랫폼창동61’은 서울시의 것도, SH의 것도, 입주 뮤지션들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비록 서울시와 SH 공사의 자산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면, 그곳에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생산하고, 그 자원들을 함께 향유하고, 그것들 기획-분배-관리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의 자산이다.

동북4구의 문화적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창동61’

플랫폼창동61이 창동-상계 지역을 포함해 동북4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도봉구에 위치한 곳, 창동 주민들의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장소와 인프라가 낙후된 동북4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도봉구와 창동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자신의 자원이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지 못하다. 아무래도 장소와 위치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창동61에서 그동안 진행한 사업 중에서 동북4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개장식 때 ‘동북4구 플리마켓’이나 ‘한예종 교수와 함께하는 청소년 크리에이티브스쿨’이 대표적이지만,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곳이 동북4구의 문화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플랫폼창동61이 진정한 동북4구의 지역 커뮤니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까?

먼저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동북4구의 시민 커뮤니티 그룹들이 플랫폼창동61을 자신들의 문화적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화적 플랫폼은 물리적 공간의 점유로 환원될 수 없다. 지역의 커뮤니티 그룹들이 물리적 공간의 점유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가장한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문화적 플랫폼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플랫폼창동61에서 활동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민 그룹들의 집단감성, 문화자원의 인터페이스이다. 플랫폼창동61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의 거점공간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음악인들과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의 공간, 푸드, 포토, 패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공간이기도 하다. 플랫폼창동61이 동북4구 시민들의 문화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은평구의 사회혁신센터와 같은 형태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시민들의 창의적인 협력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다. 혹자는 플랫폼창동61이 음악인을 위한 공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플랫폼창동61이 개장한 이래 공연을 본 관객들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주거 지역을 조사해보면 대략 5대5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의 관점에서서는 수동적인 참여일 수는 있지만, 음악의 불모지인 창동에서 인근 거주자가 전체 관객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으로 플랫폼창동61에서 동북4구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중요한 실천과제이다.

두 번째 플랫폼창동61은 동북4구 문화플랫폼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창동61은 이미 공간적으로 완결적인 콘텐츠로 짜여 있다. 이 공간 안에 더 많은 자원과 콘텐츠를 채워 넣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이미 플랫폼창동61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문화적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플랫폼창동61이 문화적 플랫폼으로서 동북4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충분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동북4구라는 지역적 공동체 안에 플랫폼창동61과 같은 문화적 거점공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드시 컨테이너 공간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음악의 거점공간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동북4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간 구성이나 문화콘텐츠 기획에 있어서 플랫폼창동61과 차별적인 구상이 더 필요하다. 가령 성북구는 성북천 일대에 거리예술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적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노원구는 노원역 일대에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교육공동체 플랫폼을, 강북구는 수유리 일대에 문화자원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는 로컬문화의 거점공간을 기획하는 상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문화기획자와 지

역시민 주체 그룹들, 그리고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꼼꼼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플랫폼창동61은 아직은 동북4구의 공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도봉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3구에서 이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약간의 호기심과 부러움의 대상 정도로밖에 간주되지 않는 듯하다. 다른 동북4구의 자치단체는 계기가 되면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의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한다. 한편으로 플랫폼창동61이 인위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형식적 분배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곳이 특정 지역의 프리미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의 평균적인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플랫폼창동61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상상력이다. 현재 동북4구의 협치를 위한 조직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도 있고, 동북4구 구청장들의 모임인 행정협의체도 있으며, 이 지역이 청소년들의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교육혁신지구 모임도 있다. 이밖에 동북4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 그룹들도 많다. 동북4구의 대안적인 문화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복제된 플랫폼창동61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플랫폼창동61은 그러한 문화적 플랫폼의 대안적 협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상상할 수 있는 설계도면 불과하다. 결과가 또 다른 플랫폼창동61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 가능하다면 문화적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동북4구에 활발하게 ‘기획-구상-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서울시 동북4구, ‘문화창조도시’의 가능성과 잠재성

서울시 기준 동북2생활권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지역화전략소위 기획위원)

서울시와 동북4구를 읽는 도시개념들

거대 국제도시를 모델로 삼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개념의 대표적 선구자는 잘 알려진 두 사람이다. 리처드 플로리다와 찰스 랜드리. 이중 찰스 랜드리는 신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2000년대를 풍미한 ‘창조도시’ 개념이 남용됐다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시민도시’(Civic City)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는 도시모델의 진화를 3단계로 나눴다. 그에 따르면 City 1.0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City 2.0은 창조경제로의 전환과 상응한다. 반면 City 3.0은 도시와 경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Micro Agent)가 모두 연결되어 창조성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즉 City 3.0은 도시개발, 민주주의, 지역경제, 공동체의 현안을 통합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시민 모두의 창조성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정리하면 ‘창조도시’ 개념은 City 1.0과 2.0 모델에 걸쳐 있고 ‘시민도시’ 개념은 2.0과 3.0 모델에 걸쳐 있다. 이들 개념의 상관관계를 풀면 이렇다. 기존의 국제도시를 지칭한 거대 ‘창조도시’를 시민 모두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시민도시’로 재편하고 그 ‘시민도시’들이 연합하는 유기체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시민도시’란 그 정의와 범주가 참으로 모호한 창조경제(City 2.0)의 발원지를 지목하면서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City 1.0)도 이제는 작동 원리를 시민 모두의 창조성(City 3.0)에서 찾자고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시민 모두의 창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는 과감한 도시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창조성(창의성)의 주체 개념을 두고 ‘특별한 개인 대 시민 모두’의 논쟁 구도에서 시민 모두의 손을 든 것이다. 이 행렬에는 민선6기 서울시의 시정 비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도 있다. 이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뿐 아니라 민선 5기와 6기의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용한 구호 ‘시민이 시장이다’는 매우 대담한 발설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구호에서 계획으로, 계획에서 실행으로, 실행 요강에서 일상 규범으로 추동할 실천 의

지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고양시키고 있는가이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현안으로 부상한 ‘협치 서울’(원리의 도입)과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주체의 재구성)의 발상은 예상되는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시민도시’ 개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도시’ 개념은 시정 전반에 적용되어야 옳겠고 민선6기 서울시의 4대 시정 목표를 관통해야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현재 4대 시정 목표엔 1. ‘안전한 도시’ (안전, 교통 분야 14개 과제), 2. ‘따뜻한 도시’ (복지, 건강, 여성·가족, 교육, 주택·건축 분야 53개 과제), 3. ‘꿈꾸는 도시’, 4. ‘숨쉬는 도시’ (환경, 녹지 분야 18개 과제)가 나란히 있다. 이중 3. ‘꿈꾸는 도시’ 목표는 창조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재생 등 4대 분야의 59개 과제를 포괄해 가장 방대하다. ‘꿈꾸는 도시’를 따로 일별해서 보려는 이유는 총 143대 과제 중 최다 과제가 망라돼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차적으로 문화·관광 분야가 ‘꿈꾸는 도시’ 목표에 속해 있어서이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경제,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꿈꾸는 도시’ 목표의 4대 분야는 담당 부처가 다 달라서 행정의 공급 논리상 구조적 칸막이 현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를 극복하고 융합해야 ‘꿈꾸는 도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성공 경험이 발생한다면 다른 시정 목표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6월27일과 28일 연달아 발표된 서울시의 ‘창조경제 캠퍼스타운’과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다. 이중 캠퍼스타운 보도자료를 보면 ‘일자리 및 주거 불안정의 청년문제와 지역 경제 침체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소개돼 있다. 이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캠퍼스타운조성TF팀에서 했는데 과제 다수는 ‘꿈꾸는 도시’에 걸쳐 있다. 서울시는 칸막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했지만 신설 부서가 도시계획국에 있으면서 도시재생본부의 여러 부서는 물론 문화본부까지 넘나들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캠퍼스타운의 핵심이 “대학시절부터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각 대학은 물론 해당 자치구의 협력이 절실하다. 문제는 “2025년까지 약 1520억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협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협치 서울’과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주목하자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주제는 갈수록 우리(를 누구로 설정하든)의 당면 과제로 더 자주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다음날 발표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꿈꾸는 도시’의 4대 분야 중 문화·관광 분야의 향후 15년 방향과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보도자료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에서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들은 5대 문화시설 건립을 앞세워 보도했지만 이 계획의 핵심은 5대 범주별 미래상으로 문화주권도시-개인, 문화공생도시-공동체, 문화재생도시-지역, 문화창조도시-도시로 삼고 이를 추동할 원리로 문화협치도시-행정을 제시하는 4+1 개념의 구조물에 있다. 제목은 ‘문화시민도시’이고 개인-공동체-지역을 쌓아올려 실현코자 하는 미래상의 최상위 목표는 ‘문화창조도시’로 설정돼 있다. 제목

에서 ‘문화’를 빼면 ‘시민도시’ 개념처럼 보이고 최상위 목표에서 ‘창조’를 빼면 ‘문화도시’ 개념처럼 보인다. 알다시피 ‘문화도시’ 개념은 ‘창조도시’의 선행 모델로 1980~90년대의 유럽 도시재생기를 풍미한 문화적 도시모델이다. 그러니까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쓰인 도시개념들은 근미래의 ‘시민도시’(City 3.0)로부터 출발하면서 근과거의 ‘창조도시’(2000년대)를 넘어서려고 하며 동시에 30년 전 과거의 유럽 ‘문화도시’까지 두루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물론 이 문화~시리즈 작명은 문화주권부터 문화협치까지 4+1 개념의 구조물에 붙인 일관된 수사적 단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표 작성자와 계획 수립자인 서울시 문화계획위원회를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와 연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들 도시개념의 복잡한 착종과 혼용은 엇비슷한 현상일 것 같다. 이는 학술이나 행정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다음 몇 가지 사정이 뒤엉키며 복잡해진 집단 심리의 투영일 것이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국가정책의 후순위에 머물러왔던 오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영역 내부에서는 문화와 예술 개념을 엇치락뺏치락 사용하면서 한편에선 순수 예술진흥으로 한편에선 문화산업으로 갈지자 행보를 하느라고 문화(예술)이 시민생활의 전 영역으로 흡수 혹은 확산된 사회적 변화 과정에 방어 태세로 일관하는 관성을 키워왔다. 그 결과 문화(예술) 영역은 사회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할 마땅한 개념과 전략이 부족한 상태에서 칸막이로 구조화된 행정과 함께 융합이란 시대적 과제와 통음하면서 향후 15년의 방향과 계획에 ‘문화’와 ‘시민’과 ‘창조’와 ‘협치’를 다 담아내야 했던 저간의 사정 안팎에 걸쳐있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나 “그때가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럼 자유분방하게 책임에서 거리를 둔 자리에 어울리는 방언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혹은 그림에도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공론화하는 미덕을 갖고 있다. ‘문화시민’으로 시작한 제목의 귀결이 ‘시민도시’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 시민들이 시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지역에 대한 설계와 추진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 구조를 제시한 점은 강점이다. 약점은 공동체와 지역으로 수렴되고 종합되는 세부 계획이 부실했을 때 커진다. 그렇게 되면 시민 주체는 출현할 수 없으며 ‘시민도시’와 ‘문화창조도시’의 전망은 시민이 아니라 엘리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에 관한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양극화와 청년빈곤 그리고 이주민 문제가 결합돼 있는 현대 도시국가 조건에서 극단적 선동 정치가 부책임한 부채질을 했을 때’라는 설명이 타당하다면 2030년까지를 다루는 서울시 ‘문화시민도시’에서는 공동체-지역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을 양축의 핵심 개념으로 보완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창조’와 ‘문화’라는 수식을 지우고 공동체-지역-시민도시로 나아가는 간명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협치의 주체 형성과 콘텐츠를 문화다양성으로 번역하고 각색하는 작업이 한층 절실해 보인다.

서울시 동북4구(서울시 기준 동북2생활권)를 ‘문화창조도시’로 읽고 그 가능성과 잠재성을 살피는 일은 이런 정황들이 교차하는 한복판에 놓여있다. 동북4구 행정협의체가 발족하여 행정 단위에 관한 새로운 관행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향후 운영전략의 일순위로 지역화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그 정황들 중 하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정황은 서울시의 하향식 권역별 계획과 더불어 동북4구라는 173만 2640명 (2016년 3월말 기준, 외국인 18만명 포함)의 인구가 험겁게 이웃하고 있는 사회적 잠재성이다. 이것이 잠재적 현실이자 중요한 정황인 까닭은 인구절벽, 재정절벽, 고용절벽, 소비절벽의 온간 절벽에 선 조건에서 1000만 명의 거대 도시 서울시와 평균 40만 명의 자치구는 양쪽 모두 출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산과 권한만 봤을 때 서울시는 공룡이고 자치구는 개미다. 공룡이거나 개미이거나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실재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이 꽤 오래 유지돼 왔고 우리의 문제 태반은 그 부조리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적이나 적다. 이것이 공룡과 개미 사이에서 적정 규모로 권한과 예산이 재배분된 ‘시민도시’를 계획하고 그 도시들의 유기체로서 ‘문화창조도시’를 사고하며 감각해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사고와 감각이 일단 개시되면 서울시 9개 생활권 모두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것들과 잠재한 것들의 동북4구

가능성과 잠재성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주류 철학과 대안 철학에서 단골 주제로 다뤄온 핵심주제다. 대략 가능성-실재성(Possibility-Reality)의 짝과 잠재성-현실성(Virtuality-Actuality)의 짝으로 대별된다. 앞의 것이 주류 철학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 체계다. 가능성이 먼저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러저러한 사항이 충족되면 실재성이 된다는 식이다. 반면 대안 철학은 실재성이 먼저 있고 그것을 보다보니 가능성이라는 비실재성에 대한 사고가 나온다고 뒤집는다. 예컨대 플랫폼창동61은 현재 실재성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비실재의 장소들에서 플랫폼창동61과 비슷하거나 좀 다른 것을 바라게 되다가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된다. 단지 이러저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못해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삼선동, 플랫폼중계동, 플랫폼변동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실재성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가능성들 외에 동북4구의 잠재성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잠재성도 실재하고 현실성도 실재하지만 잠재성은 비가시적이고 현실성은 가시적이다. 요컨대 잠재성은 엄연히 존재하나 아직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만약 그 잠재성들이 현실성을 갖게 될 때 무슨 변화를 가리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선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먼저 동북4구에는 최다 인구의 예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자격증명 신청자(신청 안 한 예술인이 훨씬 많다.)의 최근 3년 누적 통계만 봐도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 2위(전국 2위), 강북구 8위, 노원구 12위, 도봉구 16위다. 서울시 및 전국 1위는 마포구로 성북구와 별 차이가 없으며 동북4구(동북2생활권)의 예술인 규모는 서북생활권(은평, 서대문, 마포구)과 쌍벽으로 가장 많다. (3위는 동북1생활권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구이며 4위는 도심생활권 종로, 중구, 용산구이다.) 동북4구의 이런 예술인 거주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공공 문화시설은 2014년 서울통계 기준으로 등록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을 다 합쳐 11개에 불과하다. 서북생활권은 더해서 4개다. 공공 문화시설

이 집중된 곳은 도심생활권으로 28개다. 이 통계에는 도서관 및 대학의 문화시설이 빠져 있다. 서울시의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에 따른 신 도시재생 모델이 실현되어 동북4구 소재 17개 대학의 문화시설이 지역에 개방되고 지역 정체성으로 혁신된다면 꽤 커다란 변화가 닥쳐올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대로 인구 10만명당 27.3개소인 시민 생활문화 공간이 30개로 확대된다면 동북4구엔 50여개 이상이 신설되는 적잖은 변화가 생긴다. 나아가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25개 추진과제 중 21~23에 해당되는 향후 5년간 총 731억원이 “예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성장단계에 맞춘 예술인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양질의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예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제대로 쓰인다고 상상해보자.

문제는 동북4구를 연결하고 포괄하는 운영 주체의 역량과 협치의 체계적 구조를 어떤 수준에서 가동할 수 있느냐, 이에 관한 계획과 노력에 얼마만한 투자를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말했듯 1000만 공룡 한 마리가 40만 개미 25마리에 각기 떼어 나눠주는 기존의 지원체계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 최소한 서울시 기준 9개 생활권 규모로 묶이고 생활권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지역간, 자치구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생활권의 내발적 선순환 구도라는 새로운 현실성을 통해 점처럼 수축되어 술하게 나눠 있을 뿐인 잠재성들을 상호 팽창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동북4구의 각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문화재단과 도서관과 문예회관과 문화원 등을 묶고 여기에 시립 북서울미술관과 시립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등의 잠재성이 통섭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맞게 서울문화재단의 조직과 예산이 지역화 전략에 따라 재구성된다면 어떤 현실성을 낳게 될까.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 및 경험으로는 이러저러해서 불가능하거나 힘들 것이라는 수많은 이유들이 먼저 고려되겠지만, 또 그런 청사진이 어느 세월에 실현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겠지만, 그 많은 잠재성들을 현실성으로 비약시키는 전망을 갖고 한 번과 두세 번의 도약이 시작되면 빅뱅에 버금가는 연쇄적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훨씬 좋은 현실이 저기 존재하는데 이곳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고립된 현실을 누가 고수하려 할까.

다음은 동북4구의 도서관이라는 엄청난 잠재성이다. 이 잠재성이란 표현 역시 각각의 도서관 건물과 서비스는 실재하되 그것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지역화된 정체성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비가시적이면서도 엄연히 실재하고 있어서다. 왜 ‘엄연히 실재’하느냐면 우리의 공립 도서관 역사상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은 있으나 지역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은 수립된 적이 드문 반면 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상당한 밀도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하자. 현재 동북4구의 구립 도서관은 총 25개이다. 성북구 8개, 강북구와 도봉구 6개씩, 노원구 5개다. 이는 서울시 9개 생활권 중 1위다. (2위는 동북1생활권 18개다.) 구립이 아닌 시교육청 도서관은 노원구와 도봉구에 한 곳씩 있다. 마을 개념 단위로 포진한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 포함)의 경우도 동북4구는 총 145개로 서울시 9개 생활권 중 1위다. (2위는 127개로 서북생활권이고 3위는 116, 113개로 동북1생활권과 서남2생활권 구로, 금천, 영등포구이다. 나머지 5개 생활권은 85개 이하로 큰 폭의 낙차를 보인다.) 이중 구립도서관에 국한해서 도서관, 장서, 대출 수를 살펴보면 동북

4구는 25개 자치구 중 5위 이내(성북, 강북, 노원)에 드는 높은 사용률을 보인다. 나아가 성북의 경우 구립도서관 등록 독서동아리가 112팀 1207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구 중 구립도서관 기반 1위다. (도서관 기반을 넘은 모든 등록 독서동아리 수는 관악구가 1위다.)

이런 잠재성이 동북4구 곳곳에 점점점 실재할 뿐 온갖 선으로 연결되고 면적과 입체로 드러난 적은 없다. 앞서 서울시의 생활 문화공간 확충 계획을 언급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열거된 생활문화시설 항목 중에서 도서관만큼 이미 압도적으로 실재하는 잠재성은 없다. 도서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서관에 상주예술단체가 머물고 연습장과 작은 공연장이 가동되며 찾아가는 동북지센터와 보건소 기능이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물론이고 이웃한 대학 캠퍼스하고도 연계된 마을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지역도서관의 잠재성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선 도서관이 대피소 역할을 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선 편의점이 같은 역할을 맡은 사례가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 장소와 그 네트워크가 가정 다음으로 생활의 중심적 공간이라는 신뢰가 쌓여있는 사회적 자본의 플랫폼이었던 셈이다. 책은 어디에나 있으며 독서는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 물론 도서관에 가면 한가득 책이 있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 생활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며 도서관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성은 주민 생활과 분리된 책의 신전일 뿐 생활(마을)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수는 없다.

다음은 SH 공사가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새로운 추세를 보자. 현재 성북구에는 1인 창조기업가들이 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도전숙이라는 이름으로 2호까지 운영되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성동구도 도전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에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이 도전숙 3호 예술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곧 입주 공모가 마감된다. 여기에 삼선동, 성북동 일대에 연극인 전용 배우의 집(서울시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사회적 기업이 관리 운영한다.)이 잇따라 들어섰고 동선동에는 민달팽이의 청년주택이 들어섰다. 대략 20세대 안팎이던 이런 추세는 청년과 예술인 입주에 대한 이웃주민의 호감을 확인하면서 SH는 성북구와 함께 정릉동과 월곡동 일대에 각 140세대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계획대로 향후 15년간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천호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각종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예술단체 입주를 지원한다면 지역과 예술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술인 복지와의 예술 지원이 합쳐질 것이고 종내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와 작업공간이 안정되고 생활비 지출이 줄면 예술인의 생애주기 설계와 지역 정주에 대한 지향성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작품 활동에도 다른 영감을 줄 것이다. 도봉구과 강북구에 다량 존재하나 문화적 도시재생의 거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같은 방향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동북4구는 혁신적인 공동체 주거혁신의 진원지로서 청년과 예술인의 지역 생태계라는 커다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동북4구가 모두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이 또한 점으로 각기 따로 실재하는 잠재성의 영역이다. 법정 교육과정인 혁신학교와 다르게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의 협치 영역인지라 지역 학교의 참여 의지가 미진한 상태다. 하여 마을학교라는 당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혁신교육지구에 따른 주체의 등장과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각 자치구의 판단과 형편에 따라 동북4구 혁신교육지구는 대체로 방과후 과정 지원과 학교 지원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한 마디로 혁신교육지구의 ‘혁신교육’과 ‘혁신지구’에 대한 정체성이 부재한 채 여러 필요와 욕구가 이합집산 되어 혁신교육지구라는 협치 영역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동북4구의 혁신교육지구에 의한 개별적 성과도 있지만 그것이 ‘교육’과 ‘지구’를 관장하는 혁신의 정체성에 의해 추동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서 살펴봤듯 같은 연유로 25개 자치구 저마다의 노력만으론 해결될 수 없다. 개별 학교의 혁신이 아니라 교육을 지구 단위로 혁신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동북4구 정도의 생활권 전체를 놓고 사고해야 하며 시교육청도 그에 부응해서 권역별 교육지원청의 사명과 역할을 협치라는 전망 아래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 청사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동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대략 세 가지가 있지 않다. 하나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다. 또 하나는 중1학년의 1년간 자유학기제 실시다. 마지막은 서울시가 문화예술교육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생활권 단위로 전면 재편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끝으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을 동북4구에 산재한 잠재성의 ‘끝판왕’ 정도로 다뤄보고 싶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많은 대학이 강북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캠퍼스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형 창조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정도로 동북4구에는 대학이 참 많다. 성북과 노원구에 각 7개씩, 강북과 도봉구에 각 2개와 1개씩 총 17개 대학이 이웃해 있다. 이들 대학의 재학생은 10만 7628명으로 동북4구 인구의 6%다. 앞서 본 외국인 10.4%(18만 명)과 아동청소년 11%(초중고 재학생 18만9천 여명) 등 동북4구는 문화다양성 주체가 고루 차서 넘쳐야 마땅한 곳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의와 타의로 고립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을 오갈 뿐이다. 특히 동북4구 대학교의 매해 졸업생 2만8천여 명이 동북4구에서 어디로 증발해버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계획에 의해 2만8천여 명 중 일부가 재학생 시절부터 지역에서 창업 등 활동에 종사하며 규모를 늘리게 된다면, 더불어 대학 캠퍼스가 개방되어 지역화 된다면 그 영향력은 메가톤급일 것이다. 물론 대학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선 학문의 전당에서 기업의 성채로 바뀐 대학이 지역의 창조경제 주역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일 것이다. 하지만 캠퍼스타운의 잠재성은 꾸준히 실재해 왔고 이렇게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계획에 의해 막 호명되고 있다.

시범사업 1호인 고려대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은 서울시 발표가 있기 전부터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해왔다. 또한 그 전부터 서울연구원-성북구-국민대에선 캠퍼스 타운 종합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민대는 정릉동 일대의 캠퍼스 타운에 관한 마스터플랜 초

안을 마련한 상태다. 동덕여대 역시 성북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작년부터 대학을 일부 개방하면서 월곡동 일대의 문화재생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소재 52개 대학 중 46개 대학에서 캠퍼스타운 추진 MP 교수를 추천해서 서울시와 대학 사이엔 초기 단계의 추진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중 성북구 7개, 노원구 5개, 강북구 1개 대학이 MP 교수를 두고 있다. 두고 볼 일이겠으나 이들 대학이 캠퍼스타운이라는 잠재성을 현실성으로 드러내는데 성공한다면, 그 핵심적 징후는 선행 사례와 닮은꼴의 유사성에서 벗어나 소재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특화된 달라짐(차이)의 생성에 있을 것이다. 정릉동의 국민대와 월곡동의 동덕여대가 만드는 캠퍼스타운과 창조경제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데 유사해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대학지원 공모사업에 휘둘리며 엇비슷한 결과물을 양산했던 종래의 대학 프로젝트와 다를 바 없어질 것이다. 한 곳이 시작하고 두세 곳이 다른 캠퍼스타운으로 지역화 되면 다수가 짝퉁으로 흘러가더라도 목표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의 성패와 그 메가톤급 영향의 시발은 52개 대학이라는 양 보다는 초기의 질적인 혁신 사례가 좌우할 것이다.

동북4구에 새겨진 개발의 흔적들

이상 열거한 것 외에도 이를테면 창동 아레나 건립이라는 실재성이 불러올 또 다른 가능성들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단적으로 창동 아레나에서 근무하게 될 종사자들을 동북4구 안에서 출퇴근하게 만들지에 따라서, 창동 아레나가 불러올 경제유발효과가 막연한 부풀리기가 아니라 동북4구의 지역발전기금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창동 아레나에 찾아올 대중음악 한류의 아시아 및 세계의 젊은 팬들이 아레나 공연을 보고 명동과 강남으로 빠져나갈지 아니면 동북4구의 역사문화관광 코스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닐지에 따라서 창동 아레나의 실재성은 현재로선 비실재하는 여러 가능성들과 화학 작용을 일으키며 또 다른 실재를 만들 수도 있고 물과 기름처럼 곁에 있으나 가장 남남일 수도 있다. 잠재성 차원에서 봐도 동북4구에 산재한 재래시장의 영역은 서울시가 청년 주체와 공공미술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발굴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 꺾이나 다른 미래에 당도할 것이다. 단적으로 서울시의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중기청의 전통시장 현대화와 다를 바 없는 유사성의 늪에 빠져 실패로 귀결되는 생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한 동북4구의 재래시장이라는 잠재성은 각각의 점으로 유편된 채 흥과 성보다는 망과 쇠를 향해 예정된 전철을 밝을 공산이 크다.

끝으로 동북4구에 새겨진 근현대 개발의 흔적들 중 일부를 살펴보자. 서울연구원이 2013년에 펴낸 ‘통계로 본 서울인구, 경제, 교통, 주거’를 일부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시 9개 생활권 중 동북4구의 인구는 1위로 16.8%다. 2위는 동북1생활권이다. 이중 노인가구 비율은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 1위, 도봉구 6위, 성북구 9위, 노원구 10위로 9개 생활권 중 동북4구의 노인가구가 가장 많다. 게다가 서울시 5대 권역 중 동북4구가 속한 동북권은 6대 전략산업 분포에서 평균 최하위며 소득은 2011년 보통가구(48.3세 남자가장, 월 327만원 소득) 기준에서 서남권 308만원에 이어 310만원으로 꼴찌 수준이다. 교

통과 주거를 보자.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통근하는 일일 125만 명의 유입 통로는 강남으로 도착하는 동남권, 도심에 도착하는 서북권, 영등포에 도착하는 서남권이 활성화된 반면 동북권으로 유입되는 통근자는 매우 적다. 또한 서울시에서 외부로 통근하는 일일 62만 명의 유출 통로에서도 동북권 수치는 가장 적다. 요컨대 동북4구가 속한 동북권의 경우 통근 유입도 유출도 미미해서 대부분 권역 안이나 서울시 내부를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 주거형태는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1위(81.2%) 노원구와 4위 도봉구(54.2%)가 있고, 아파트 대 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의 비중에서 후자 비중이 5위인 강북구(73.5)와 반반에 근접한 성북구가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동북4구는 9개 생활권 중에서 인구 밀도와 노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산업 기반과 보통가구 소득은 꼴찌다. 또한 수도권과 통근하는 왕래가 유독 적어서 일터와 주거가 모두 생활권 내이거나 서울시 안이다. 주거 형태는 4개구가 각기 상이하며 서울 평균치는 성북구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서울시와 수도권을 지배해온 근현대사의 개발주의가 남긴 서로 다른 흔적과 현재의 면모를 대비하게 만든다. 요컨대 서울시의 동북4구는 개발주의의 집중적인 주거 배후지로서 수도권 도시들 전체에서 가장 고립된 역사의 자취를 승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여 역설적이게도 ‘오래된 미래’의 관점이나 개발과 재생의 뒤죽박죽 전환기라는 감각에서 동북4구는 현재 서울시 9개 생활권 중 아동청소년 인구와 초중고 수치에서 1위이자 대학 밀도 1위의 교육도시라고 불러야 맞겠다. 또한 예술인 거주 전국 1~2위 도시이자 도서관 도시 1위이며 임야, 하천, 공원의 비중이 전체 면적의 49%에 달하는 생태적 도시라고 부연해야 하겠다. 그래서 동북4구의 행복지수가 높고 ‘문화창조도시’의 매력은 높은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동북4구는 스스로 교육도시, 예술도시, 도서관도시, 생태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논한 바가 있을 터이나 그것은 일부 잠재성이었을 것이다. 그 잠재성이 더 크고 더 많은 현실성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한 마디로 동북4구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사람 말고는 가진 게 없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점에서 시민 모두의 창조성을 십분 발휘하게 하는 ‘시민도시’로 출발해서 공동체와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창조도시’의 길 외에 그 어떤 잠재성이 더 현실적인 것일까 싶기도 하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주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생산성이라는 상식선에서 보아도 10만 7628명의 대학 재학생과 매년 2만8천여 명의 졸업생을 동북4구에 정착토록 하는 방안은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없는 동북4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도시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당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인구 측면 외에 재정 투입 측면에서도 17개의 대학 캠퍼스는 동북4구로선 진지하게 재조명해야 할 막대한 지식 자원이자 공간 자원으로 그에 필적할만한 지식 및 공간 자원을 따로 공급할 여력도 없다. 도봉구와 노원구에 들어설 아레나와 글로벌비즈니스존 등 서울시의 대규모 건립 계획도 이를 소화하고 남은 지역의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다면 동북4구에 소재하되 무관한 인공 섬처럼 되기 쉽다. 이처럼 ‘사람이 중심’이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이 전부인 동북4구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이 무엇일지 자꾸 다시 자문하게 된다.

일제 감정기에 8개 구의 서울시를 물려받은 다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서울시에 최초로 세운 9번째 구가 성북구였다. 1951년 3월27일에 개칭한 성북구에는 1962년 서울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양주군 일부를 편입하면서 1970년 기준 9개 자치구 중 인구 97만 명과 방대한 면적을 망라했던 때가 있었다. 그 후 1973년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구되고 1988년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되고 1995년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었다. 동북4구는 그렇게 하나였다가 25개 자치구의 1개씩으로 나뉘었다가 지금 다시 동북4구라는 이웃의 꿈을 꾸려고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일지 “꿈은 꿈일 뿐”일지 알 수 없지만 동북4구의 가능성과 잠재성은 “우리는 하나”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차이의 존중과 강렬한 연대라는 고난이도 곡예의 기술에 성패가 달려있지 싶다. 이 기술을 익힐지, 꼭 습득할 것인지 하는 판단과 지혜가 오늘의 동북4구를 살고 있으며 꿈꾸고자 하는 이들 앞에 과제로 놓여있다.

그 판단과 지혜의 요청 앞에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나란히 서야 하겠지만, 오늘 이 포럼은 서울문화재단의 의지와 성북문화재단의 사례 그리고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61이 어울려 개최됐다. 한층 본격적인 추동은 서울시와 동북4구 행정협의체가 개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과 민간 영역의 여러 주체가 협치라고 하는 미증유의 실험적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 이 포럼의 특성상 ‘문화창조도시’에 얽혀 있는 주요 도시개념들과 이를 제각기 수행해온 조직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의 문제로부터 심사숙고하고 혁신하는 일은 동북4구라는 전체의 꿈과 따로 또 같이 가면서 그 나름대로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꿈은 꾸는 동안 닳게 된다”고도 하니까 말이다. 하여 경향신문 6월16일자에 실렸던 칼럼 원고를 추신으로 보탠다.

추신) 거기 뭐하는 데예요?

서른 명의 청소년에게 진로강의를 했다. 나와 내 일터를 소개하고 강의를 했다. 세상을 알아가고 부모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것이 진로를 찾는 길이라는 요지였다. 질문에 답한 후 마무리 말을 했는데 질문자가 또 있었다. 담담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역문화재단은 뭐하는 데예요?” 순간 눈앞이 노래지면서 대답이라고 한 설명은 내 귀에도 “웁케짜얌겨귀 꿈겨서팻흐으” 같이 들렸다. 말을 마칠 땐 “지금 몬소리?” 안하고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울 뿐이었다. 그러나 질문은 계속 따라 다니며 물었다. 그런 대답 말고 진짜 응답을 해보라고. 돌아볼수록 그 청소년에게 미안해서 이 글을 쓴다.

‘살인적 노동시간’보다 긴 공부시간을 견뎌 대학에 가면 진로를 잃어버린 채 정규직 전환의 꿈을 찾아 비정규직을 전전할 확률이 더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진로강의를 한 나에게 “지역문화재단은 뭐하는 데예요?”라는 질문은 무엇이였을까? 지역문화재단이라는 데에서 일하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물음이었다. “나에게 (지역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물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천명하고 서울시장이 ‘문화시민도시’를 선언하는 나라의 72개 지역문화재단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나에게 그 청소년은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거기서 당신이 하는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 글은 나의 “웁케짜얌겨귀~” 했던 상념을 정리하는 반성문이자 전국 지역

문화재단 종사자들에게 “지금 몬소리?” 하는지 돌아보자는 권고문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역사는 이렇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해 평균 3개씩 생겼다. 2011년 이후부터는 매해 평균 5개씩 생기는 추세다. 이런 증가의 배경에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다. 문화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문화예술진흥법이 나오고 32년이 지나 시행된 법이다. 민관이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0년, 국회에서 입법 발의 폐기된 뒤 8년이 걸려 탄생한 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적인 구상은 2004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창의한국>이 출발점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과제’가 지역의 문화진흥에 달려있다, 그 ‘선결과제는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다. 이를 위해 국가-지역-주민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지역문화진흥계획,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문화재단 등을 명기한 지역문화진흥법이 나왔다. 너무 늦었다.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1997년 전후거나 2004년 무렵에는 나왔어야 했다. 지각생이라도 지역문화진흥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면 다행이나 현실은 안 그렇다.

법 시행 2년째지만 그 계획, 그 기금, 그 재단은 개점휴업이다.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는 아직 일방향이다. 바람직한 분담과 협력체계는 없다. 하여 날로 느는 지역문화재단은 민법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 프랑케슈타인처럼 짜깁기된 정체성을 가진 채 자신이 누구며 부모가 누구지 세상을 향해 혼잣말처럼 방언을 중얼거리고 있다. 그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이미 문화와 예술은 창조경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는 물론 도시재생, 혁신교육,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사회 모든 영역과 융합 진화했다.

이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문화와 예술만 따로 추출해 진흥시켜야 할까? 가능하기는 할까? 문제는 지역문화재단 내부에도 있다. 짜깁기된 정체성 탓에 목적의식과 사명감보다는 행정 대행기관의 전문성 뒤에 숨어서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안정된 직장인의 문화, 그들만의 리그에 젖어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공무원, 대기업, 금융기관을 포함해 대략 400만 명의 정규직 언저리에 있는 직장이다. 다수의 동년배 비정규직과 함께 동일업무에 종사하되 신분 보장과 임금에선 격차가 있는 직장이다. 잘 모르는 부모는 내 자식이 정부기관의 공무원인 줄 알고 안심하는 직장이다.

이 직장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태도와 담대한 기획이 나오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온갖 중간지원조직을 따로 두어 각기 부실 위험을 키우기보다 지역문화재단과 합쳐서 지역재단이자 교육재단으로서 문화재단을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또 하나는 국가와 광역정부가 용단을 내려 지역문화재단의 정규직을 두 배로 키우고 청년과 청소년을 대거 고용하는 길이다.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못한다는 변명 대신 직접 주민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앞당기는 일에 매진하면서 예술가도 주민으로 살도록 돕는 지역문화재단이 돼야 옳다.

글을 마치는 지금도 나는 “웁케짜얌겨귀~”라고 쓰고 있는 것 같다. 반응은 “지금 몬소리?”가 아니다. “뵈이 중헌디? 뵈이 중헌지도 모름서!” 이 질문이 20대 국회와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거기 뭐하는 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 청소년이 묻고 있다.

<메 모>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정책포럼

“문화담론 순환선”



문화담론 순환선

www.sfac.or.kr